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사회진보연대

서론

우리는 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가 03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궁금한 것 10가지

1. 핵안보정상회의란 무엇인가요? 10

2. 핵안보란 무엇인가요? 15

3. 핵 테러 예방은 좋은 것 아닌가요? 19

4.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상'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25

5.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닌가요? 32

6.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36

7.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0

8.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무엇인가요? 43

9. 핵발전소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나요? 47

10.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51

자료

1.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해외 단체, 활동가들의 입장 56

2. 핵안보 관련 주요 협약 및 문서 62

함께 합시다!

70



서론

우리는 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가

핵안보?

핵안보(nuclear security)는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핵의 평화적 이용’, 즉 핵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1960년대 말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핵발전을 하게 되자, 핵물질의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적인 탈취를 예방하여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구소련 내에 존재하던 핵시설과 핵물질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구소련 영토 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의 관리, 감축, 보호 등이 핵안

보의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11 테러 이후부터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의 탈취, 악용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핵안보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애초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안보의 이슈가 변화된 것입니다.

핵 비확산과 핵안보

애초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의 통제는 비확산 체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핵비확산조약(NPT)으로 대표되는 비확산 체제는 NPT가 인정하는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비확산)하는 대신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약속(핵군축)을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핵의 평화적 이용)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비확산-핵군축-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개의 축이 핵 통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확산 체제로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체제 내외의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도의 핵무기 개발은 민수용 핵발전 기술이 충분히 핵무기 기술로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느끼는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 기술을 확보해 연

구하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핵무기 개발 경쟁에 계속 뛰어들게 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핵발전이 지속되는 한 핵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미미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들어서 자신들의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3가지 축이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거듭했고,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이러한 비확산 체제의 이탈자들 때문에 NPT 내부에 있는 나라들은 NPT 자체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됩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비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만 막고 있기 때문이죠. 비확산 체제가 핵무기 보유국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틀거리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NPT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만 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확산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비확산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물질과 핵기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는 핵안보의 개념은 이러한 비확산 체제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과 핵안보

핵안보가 미국의 핵전략, 군사 정책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NPR은 발간 시점으로부터 향후 5-10년간 유지되는 미국의 핵정책과 전략, 목표와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2010년 4월 6일 미국의 2010 NPR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핵심 계획’으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NPR은 이 핵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을 27억 달러까지 증액하며,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옵션을 유지했고,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축소될 수 있으니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사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망(MD),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해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선제 공격’ 옵션의 유지나, 강력한 차단 조치, 핵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유지 등을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확산 체제의 이탈 세력(북한, 이란 등)을 관리·

압박하여 무너지가는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핵무기의 확산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탈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발전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을 전용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은 수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경쟁이 발생하니 핵의 이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가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 테러의 차단’은 결코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핵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비확산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핵발전의 명분을 지키고,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

는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핵 발전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이나 핵발전 축소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보유국들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과 이란을 압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먼저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한 핵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오는 2-3월에는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등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히려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핵

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핵물질의 확산을 차단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뿐이고,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탈핵 흐름이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핵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의 흐름을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모여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70페이지 참조)을 조직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과 함께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모쪼록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이 핵안보정상회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중적인 탈핵의 흐름을 조직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소책자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 핵발전의 문제,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핵발전, 무너지는 신화』(<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7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6일

사회진보연대



핵안보정상회의란 무엇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발전을 확대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 패권을 강화하는 회의입니다.

오바마와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09년 4월 5일 체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 비전을 발표하면서 '핵 테러'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핵 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이지요.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구상에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2010년 워싱턴 회의에는 세계 47개국 정상들(핵물질 보유량과 핵물질 방호 현황, 핵발전소 건설 계획, 지역 배분 등이 고려되

어 선정)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1차 워싱턴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 테러 위협의 심각성 및 핵 테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 정상간 인식을 같이하고,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을 통한 핵물질 및 핵시설 관리 강화

○ 핵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UN, IAEA, G8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기구상(GICNT) 등 핵안보 관련 기존 다자 협력체의 효과적인 활용 및 각 기구간 상호 보완성 강화

▶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



핵 테러의 예방

1차 워싱턴 회의는 회의를 마치며 정상선언문(워싱턴 코뮤니케)을 발표하여 “핵 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핵 테러’를 꼽은 것이죠. 때문에 강력한 핵안보 조치를 통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이 핵물질을 얻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핵 테러를 막기 위해 각 국가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보호 능력을 높이고, 필요한 법과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협약의 내용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별도 작업계획 문서를 통해 11개 분야 50개의 핵안보 협력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 테러 대처를 위한 협력 강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7개국 정상들과 UN, EU, IAEA, INTERPOL 대표가 참석합니다. 정부는 ‘핵 테러 대처를 위한 협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워싱턴 회의의 의제를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핵안보 기본 의제인 핵 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하며 핵안보와 더불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 방사능 테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 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 예상 국가와 국제기구

아시아(12)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대양주(2)	뉴질랜드, 호주
유럽(18)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그루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2)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핵군축이나 핵발전 축소는 어디에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워싱턴 회의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핵군축 및 비확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핵발전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이나 핵발전 축소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한 핵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으며, 핵무기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는 허울일 뿐이며 인간이 100%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들의 삶을 진정 안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핵안보란 무엇인가요?

핵 테러를 없앤다면 핵무기 패권을 유지하고,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이 아니라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

핵안보란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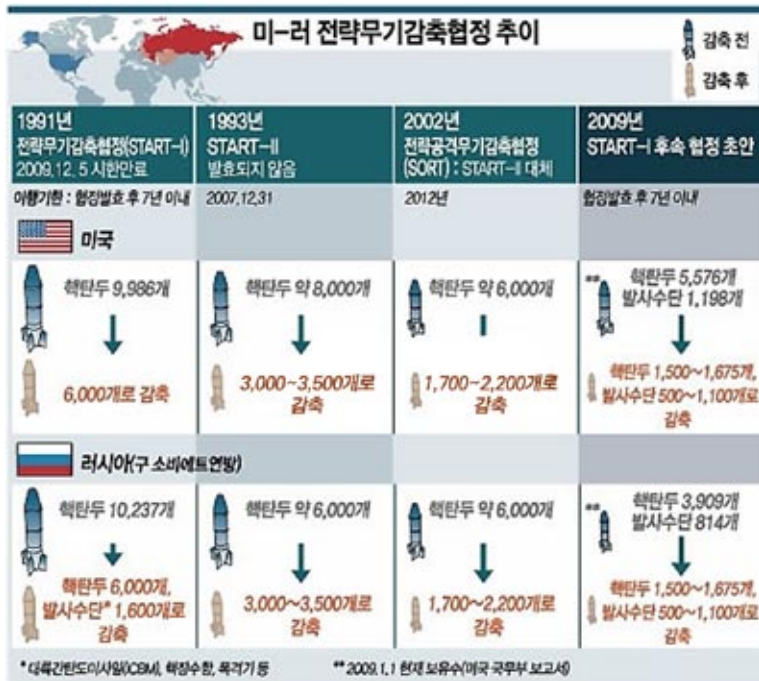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中

핵안보란 한마디로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국가

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상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획득과 무기 제조, 국경을 넘나드는 밀매 등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진행 과정을 막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핵군축과 비확산, 그리고 핵발전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핵군축과 비확산이



주된 의제였습니다. 핵군축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점차 그 수를 줄여서 핵전쟁의 위협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얼마 전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 수준으로 줄이기로 약속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같은 약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확산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물품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국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으로, 항구나 공항에서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선적을 조사하거나, 핵발전을 하는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군축과 비확산의 약속을 전제로 다른 나라들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핵발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핵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 = 핵무기 확산

그러나 기존의 비확산 정책으로는 핵무기나 핵 관련 기술이 퍼져나가는 것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와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산업용 핵발전 기술을 전용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한낱 위선이며, 핵발전은 핵무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더불어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핵물질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25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이나 8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

루토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약 126,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강력한 통제로 핵확산을 막는다?

이에 따라 핵안보정상회의는 기존의 비확산 정책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해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 보유국가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핵발전이 결국 핵무기의 확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제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되니 보다 강력한 통제책을 만들어 핵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핵발전을 확대하고,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길로 연결되며, 핵 없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 될 뿐입니다.



핵 테러 예방은 좋은 것 아닌가요?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핵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도,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물론 핵 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참사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고향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복구재건협의회’에서는 20년 후에나 이재민이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 하나의 사고로도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핵 테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핵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강력한 확산 방지책

기존의 비확산 정책보다 강력하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입니다. 이는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는 협약입니다. 이때 군사력 사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 PSI 해상 차단 훈련 모습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UN 해양법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와, 다른 나라의 영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해적질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동 협약 17, 19, 23조 무해통항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PSI는 의심만으로 배를 세우거나 승선하고 나포할 수 있으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관 시절인 2006년 말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낳을 것”이라며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정했듯 PSI 같은 호전적인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위협할 뿐입니다.

PSI는 핵안보정상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물론 PSI 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거나,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PSI가 핵안보정상회의와 무관하다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합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작업계획(work plan) 문서

를 보면, ‘미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반체 및 특히 핵물질과 연관된 관련 물질 취득 방지에 대한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 결의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 협조 제공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결의 1540호는, 2003년 9월 UN 총회에서 미국이 제의한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수출 통제 체제 강화’ 요청에 따라 2004년 4월 28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비확산과 수출 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보리결의 1540호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안보리

PSI 핵심참여국과 북한 선박 나포 사례

■ PSI 핵심참여국 ● 북한 선박 나포 사례



PSI(확산방지구상)의 대량살상무기 차단 원칙

-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들간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된 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 의심가는 확산 움직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정비
- PSI의 목적과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내 법규 강화-정비
- 국내외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

결의안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테러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조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PSI로 대표되는 적극적 반확산 정책의 국제적 수용과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편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안보리결의 1540호의 주요 조항별 내용

- 1항: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 금지
- 2항: 비국가행위자의 테러 목적 WMD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을 위한 공범, 지원, 자금조달 금지
- 3항: WMD의 계량관리, 방호, 국경통제, 불법거래와 중개 탐지 및 저지 등 국내조치 집행, WMD의 국내 수출통제와 환적통제 체제 수립 및 발전·유지
- 4항: 결의 1540위원회 설립 및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 10항: WMD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간 협력 촉구

핵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PSI가 없어서가 아니다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PSI와 같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확산 방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아직도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고, 핵발전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최대 20,500기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핵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핵무기를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군축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핵무기 공격의 위협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이 날날이 밝혀져 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이 일고 있는 지금, 핵발전의 비중을 시급히 줄여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없애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표 2] 2011년 세계 핵무기 현황(출처: 미국과학자연맹)

국가	실전배치 전략핵무기	실전배치 전술핵무기	예비탄두	보유	전체 재고량
러시아	2,430	계측 불가	5,500	8,000	11,000
미국	1,950	200	2,850	5,000	8,500
프랑스	290	자료 없음	계측 불가	300기 이하	300기 이하
중국	0	계측 불가	180기 이하	240	240
영국	160	자료 없음	65	225	225
이스라엘	0	자료 없음	80	80	80
파키스탄	0	자료 없음	90~110	90~110	90~110
인도	0	자료 없음	80~100	80~100	80~100
북한	0	자료 없음	10기 미만	10기 미만	10기 미만
합계	4,830기 이하	200기 이하	8,650기 이하	14,000기 이하	20,500기 이하

* 주1. 예비탄두: 현재 작전수행 상태에 있지 않으나 유사시 전력으로 배치되는 탄두.

* 주2. 보유: 실전배치된 탄두와 예비탄두를 합산한 양.

* 주3. 전체 재고량: 보유량과 퇴출탄두(해체 예정)를 합산한 양.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상'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말과는 달리 점점 더 핵이 많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어 핵탄두 수를 줄이기로 했지만, 그가 말하는 '핵 없는 세상'은 진정 핵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집권 초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대테러 전쟁을 지속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반면 핵군축에는 소극적이어서 그가 받은 노벨상을 환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33년 만에 신규 핵발전소 승인

첫째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이후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신규 건설하



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시 전 대통령은 임기 말미에 에너지법을 개정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핵발전소에 정부가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2012년 2월 9일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보글 지역에 있는 기존 핵발전소 시설에 전력업체 '서던 컴퍼니'가 2기의 핵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14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 정부는 83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3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한다지만 핵전력은 유지

2010년 4월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가 발표되었습니다. NPR은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과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약속하는 것과 함께, 이번 NPR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표 3] 2010 NPR의 주요 내용

핵심 계획: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	IAEA의 안전조치 강화,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 27억 달러까지 증액,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 강화,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 문책.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명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으로 인한 핵전력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지상 발사 핵무기, 잠수함 발사 핵무기) 유지, 미사일 방어나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지역 방어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보장 강화	재래식 전력, 지역 미사일 방어망, 대 WMD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핵심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핵 옵션을 유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유지	핵실험 중단,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 새로운 핵탄두 개발 중단.

그러나 NPR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번 NPR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아래서도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상징적인 수준에서 핵무기 감축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핵무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구나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생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2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NPR은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에 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정반대로 가는 미국

거기다 이번 NPR에는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어떠한 국가, 테러리스트, 미국이 행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확산 방지책을 명문화한 것으로, 향후 미국이 벌이는 전쟁과 학살,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서 ‘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이란에 대한 압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31일, ‘2012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여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

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들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 특히 원유 수출 금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임을 밝히고 있죠.

미국이 또다시 이란 제재에 나선 것은 2011년 11월 8일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개발 보고서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핵시설 확장, 핵 기폭장치 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란의 핵무장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이라크 전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은 잘못된 정보였다는 점, 즉 전쟁의 근거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죠.

핵연료 은행을 제안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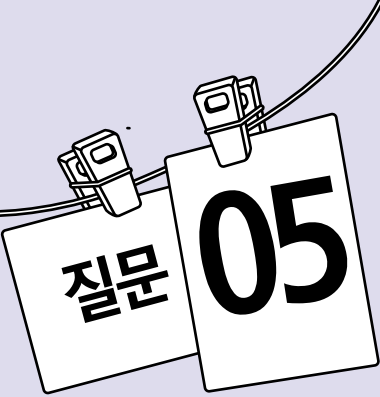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핵연료 은행’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연료 은행이란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하는 나라에 저농축 핵연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유명한 미국의 워린 버핏이 지난 200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국제 핵연료 은행 창설을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IAEA는 핵연료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 미국 역시 이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 핵연료 은행이 핵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해당 국가에 제공할 경우, 각국이 자체 연료생산 및 개발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핵무기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뿐, 핵발전 축소나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비확산 체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 기술을 핵무기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점을 이용해 핵무기 보유국

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규 핵발전을 재개하고, 핵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핵연료 은행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째는 버핏 회장의 기부금을 중자돈으로 해서 창설되는 IAEA 자체의 국제 핵연료 은행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운영하는 국제 핵연료 은행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10월 IAEA에 국제 저농축 우라늄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 인접한 앙가르스크에 국제 핵 센터를 개설해 IAEA 관리 하에 우라늄 농축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IAEA에 내놓았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러시아가 제안한 국제 핵연료 은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 핵연료 은행은 원전을 보유하거나 건설하는 국가가 완전하게 자국의 핵 비확산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IAEA는 러시아의 국제 핵연료 은행의 모든 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0년 12월 18일 국제 핵연료 은행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인 로사토크이 운영하는 이 핵연료 은행에는 2~4.95%의 저농축 우라늄 120t(국제가격으로 3억 달러 어치)이 비축되어 있고, 이는 인구 1200만 명 도시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러시아는 IAEA 회원국에 이 연료를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판매할 수 있고, 판매의 수익금으로 다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비축할 계획입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핵발전 확대를 전제로 한 핵발전소 안전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기가 필요합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핵발전소 안전 신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핵 산업계와 정부가 주장하던 핵발전소 안전 신화는 냉각장치 고장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 대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능 피해를 예방하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러나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방사능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핵산업계는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뒤 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수십,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라면서 이례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한 번의 사고가 물고 온 재앙의 규모는 너무도 거대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수습 작업을 벌여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이른바 '원전 사무라이'들이 대부분 가족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봅시다. 지금도 후쿠시마 지역의 사고 수습은 일본 전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사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도 거대한 지진, 해일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선전해왔지만, 막상 사고가 나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에서도 고농도의 방사능 아스팔트나 기준치가 넘는 주방용품이 발견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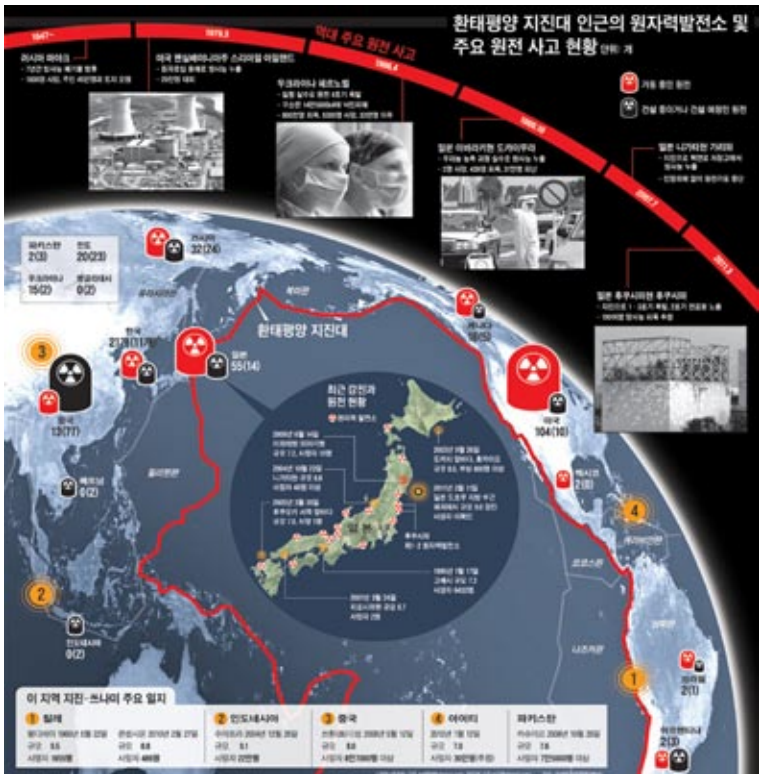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

또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0문20답]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中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소 안전을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 정

책 폐기,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축소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핵 발전을 축소하고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짜 청정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 열이나 풍력 같은 진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국격을 높인다고 하며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없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국제회의 유치가 국격을 높인다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정상회의 소개’ 中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유치

해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력이 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5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정부의 선전처럼 ‘개국 이래 최대의 정상 회담’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G20 정상회의를 돌아봅시다.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과도한 경호 조치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점상을 철거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했습니다. 또한 세계 정상들과 금융자본을 비판하는 민중들의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제대로 된 경제위기 해소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났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한국의 국격을 높인 회의가 아니라, 경제위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경제 위기로 삶의 위기에 몰린 민중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회의였을 뿐임

▶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폐쇄된 지하철 출입구



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했다며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한다고 강남에서 또다시 노점상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국격은 민중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허울일 뿐입니다.

‘핵이 더 많은 세상’에 앞장서는 한국

세계 5위의 모범적 원자력 강국인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나선다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과 원전사업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 책자
『2012년 3월, 평화방위대가 서울에 온대요!』中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커지고 있는 핵발전 정책 폐기, 탈핵의 세계적인 흐름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핵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도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라면서 핵발전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말(2011년 12월 23일)에는 한국의 핵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핵발전

소 신규건설 후보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당장 폐쇄해도 모자랄 판에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핵발전소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가 들통이 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 수준을 높인다고 하며 핵발전 확대, 핵발전소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했고 2012년에는 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 세계의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중략)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20문20답]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中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북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

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핵 문제와 노골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확산 방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의제를 실천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이란과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PSI 정책과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해 다른 나라 선박과 항공기를 정선, 나포하는 행위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가뜰이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에서 이런 군사적 충돌은 자칫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PSI 훈련

- ▶ 일시: 10월 30~31일
- ▶ 참가국: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호주 · 비례인
- ▶ 비례인: 호위함 제공
- ▶ 한국: 쿠웨이트 · 카타르 · 아랍에미리트 : 훈련 참관



선박 검사과정



1 헬기로 특수요원 투입



북한 선박

2 경고사격

1 정선요구 무기·마약을 실은 의심 선박

1 서류와 화물 확인



3 수출금지대상 화물 물



핵무기 보유국의 독점력 강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 자체에 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안보는 결국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해서 기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독점적인 힘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기존에 강조되어왔던 핵군축의 노력은 부차화되고, 무력까지 사용하는 공격적인 반확산 정책을 동원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후쿠시마 사고로 형성된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을 거슬러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군축, 핵발전 축소가 답이다

핵군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핵무기 획득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탈핵의 길을 거슬러 핵발전을 확대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들어 핵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핵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핵무기 감축과 핵발전 폐기가 없는 핵안보는 결코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핵발전 확대와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무엇인가요?

핵산업을 확대하려는 ‘죽음의 장사꾼’들이 몰려옵니다!

죽음의 장사꾼들, 핵 산업계의 정상회의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Nuclear Industry Summit)은 핵안보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연계 행사로, 2012년 3월 23-24일에 열립니다. 워싱턴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핵물질 보안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핵안보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는데, 그 후속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핵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과 핵 관련 국제기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원자력 산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핵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3개의 워킹그룹(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 원자력분야 민간 정보 보안, 후쿠시마 이후 안보와 안전의 연계)을 운영하고 핵 산

업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여 정상회의에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핵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 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표 4]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워킹그룹 구성도

구분	참여기관
워킹그룹 1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을 위한 협력 강 화 방안)	KAERI(한국), Juelich Research Center(독일), MIT(미국), Edlow International(미국), ANSTO(호주), Nordion(캐나다), JAEA(일본), Munich 공대(독일), NECSA(남아공), RIAR(러시아), INVAP(아르헨티나)
워킹그룹 2 (원자력 민감 정보 보 안 강화를 위한 국제 적 공조 방안)	Kepeco NF(한국), URENCO(영국), JNFL(일본), TENEX(러시아), GE Hitachi(미국), USEC(미국), AREVA SVP(프랑스), CNNC(중국), Sellafield(영국), INB(브라질)
워킹그룹 3 (후쿠시마 이후 핵안 보와 원자력 안전의 연계 및 증진 방안)	한수원(한국), 두산중공업(한국), ENEC(UAE), WINS, Kansai Electric(일본), Areva(프랑스), Khalifa University(UAE), Westinghouse(미국), Electronuclear(브라질), Exelon(미국), Atomstroyexport JSC(러시아), EDF(프랑스), CGNPC(중국), NPCIL(인도)

고농축우라늄을 줄이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제한하고 줄여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핵무기 감축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용 핵발전에서 고농축우라늄의 비중을 줄이면 향후 핵무기 전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더 이상 핵

무기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핵무기 개발 추세가 고농축우라늄 폭탄보다는 플루토늄 폭탄의 소량화, 경량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는 거의 무관하며,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산업계 스스로도 고농축우라늄 발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용과 핵 폐기물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핵 없는 세상,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 자체를 줄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핵발전 확대를 위한 노림수

고농축우라늄 사용 저감이나 핵기술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보안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핵산업계 주장들이 이런 문제만 논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 관련 기술은 늘상 국가 핵심 기술의 영역으로 각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이며, 산업계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워킹그룹 논의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주장들이 모여 핵발전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그동안 핵산업계가 선전해 온 핵발전 안전 신화,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신화를 벗겨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의 흐름이 거세지자 핵산업계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사람들이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자 핵 테러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핵발전소가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핵 테러로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강조하면서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노골적인 핵발전소 세일즈

또한 정부는 한국의 핵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 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운운하면서 그 효과를 부풀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발전소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핵발전소 수출 확대를 노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와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을 한국의 핵발전소 판매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기조는 오간데 없고 핵발전을 자랑하고, 핵발전소 수출 경쟁이 벌어져 죽음의 기술을 사고 파는 죽음의 장사판이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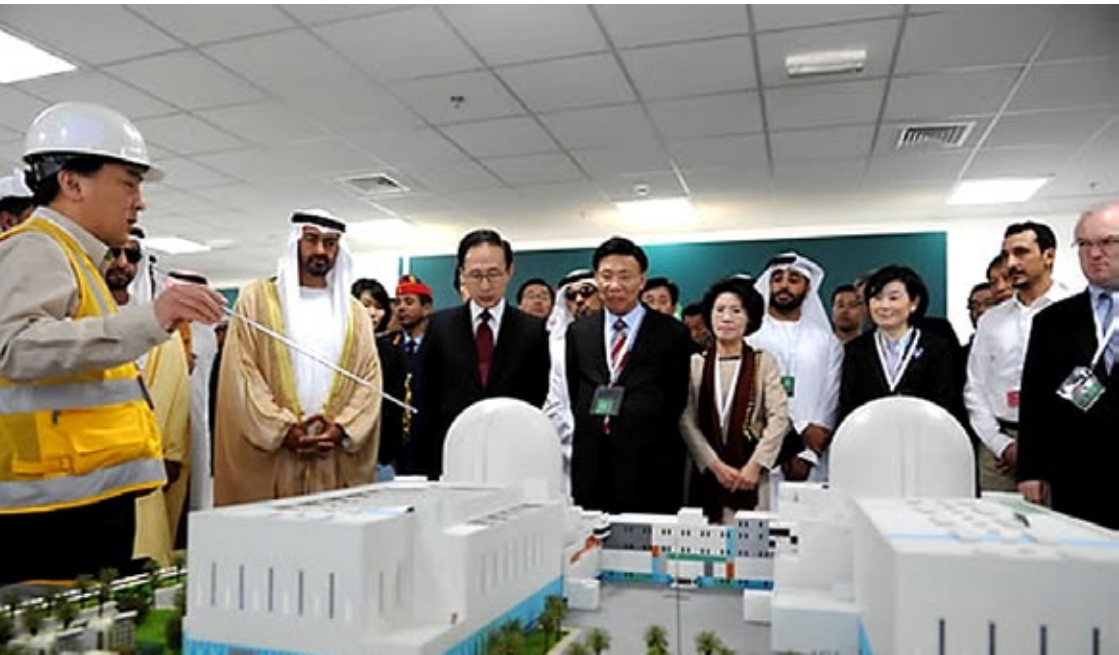
경제적 효과도 부풀려졌고,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경제적 효과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아랍에미리트(UAE)로 날아가 핵발전소를 홍보하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례적인 생방송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400억 달러의 수출이라던 것이 어느새 200억 달러로, 다시 186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건설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수출입은행이 28년 상환 조건으로 조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재정 규모가 이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더불

어 건설액 중 나머지는 UAE측 은행이 조달하지만 한전이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어 한국 측이 자본을 100% 조달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핵발전 관련 핵심 기술이 없는 한국은 UAE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다 써야하고, 결국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UAE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일본 도시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 기술,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UAE 핵발전소 수주 직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 비용만 약 200억 엔(약 2560억 원) 선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계약 내용을 군사 기밀로 묶어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어떤 계약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2010년 초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하여 세계 3위의 핵발전소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죠. 20년 동안 80기를 수출하려면 매년 평균 4기씩 수출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1년간 정부는 단 한기의 핵발전소 수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정부는 요르단에 수출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같은 해 5월 이 계약은 일본 미츠비시-프랑스 이레바 컨소시움에 넘어갔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수출이 유력하다는 발언을 계속하다가 막상 수출에 실패하자 “원래 수출이 힘든 나라였다”고 말을 바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 시놉 핵발전소 사업도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흘렸지만, 결국 터키는 일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한 이명박 정부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핵발전소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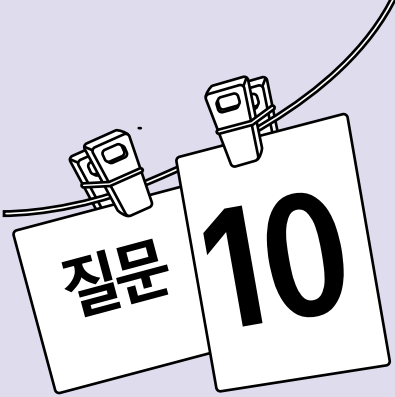
탈핵의 흐름을 거스르는 핵발전 확대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기존 핵발전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에너지 정책의 틀을 제시한 이 계획에는 핵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을 24%에서 41%로, 전력생산량 비중을 34%에서 59%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12기 정도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발전 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폐 연료봉)와 같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 중단 및 폐쇄, 신규 건설 중단,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정면에서 거스르며 핵발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핵발전을 없애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은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상’은 ‘핵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이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그 말을 실현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경쟁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처벌해도 암시장은 뒤편 어디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입니다. 핵무기와 이에 필요한 물질, 장치들이 암시장에

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FMCT, 핵분열물질 금지조약),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와 핵 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의 위험이 전 세계에 폭로된 지금, 핵발전을 축소하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요구하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핵 테러의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몇 십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고,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핵 테러’의 가능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을 거스르고, 핵무기 보유국의 패권을 유지한 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주장하는 ‘핵 테러 방지’는 결국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입니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려내야 합니다. 핵 테러 방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축, 핵발전 축소의 약속을 하

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 반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핵발전소 수출 반대!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핵발전소 안전 신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핵발전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임을, 노후한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야 합니다.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을 다 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7년 수명연장이 결정되어 10년 동안이나 더 가동되는 고리 1호기는 즉각 운전을 멈추고 폐로에 돌입해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탈핵 시위 모습.



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연장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막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핵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꿈꾸던 주민들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한국에서도 탈핵의 흐름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이익도 부풀려져 있고, 탈핵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죽음의 원전 세일즈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은 탈핵의 흐름을 거슬러 핵발전을 확대하는 원전 세일즈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 핵으로부터 인류가 안전한 세상으로 향하는 길임을 분명히 합시다.



YA BASTA!
NO MORE
FUKUSHIMA

あしたは
みんなの
平和

〈자료 1〉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해외 단체, 활동가들의 입장



1. 조셉 거슨(Joseph Gerson)

- 미국 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 2010년 6월 20일, 3차 미중 시민사회 평화 포럼 연설 중

마치 미국의 이중 잣대를 선전하려는 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생산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그의 예산안은 또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한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 연구를 위해 돈을 더 투자하고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8억 달러를 쏟아 부으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담론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칠레가 자국의 핵분열성 물질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방식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인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중동 비핵무기지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에 핵연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NPT 정신을 위반한 것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그런 물질들을 제공함으로써 비슷하게 NPT 체제를 약화시키도록 하는 위험한 인센티브와 전례를 제공한다.

2. 프리다 베리건(Frida Berrigan)

- 미국 외교정책 연구소(Frida Berrigan, Foreign Policy in Focus)



최근 핵무기주의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막 그의 핵안보정상회의를 끝마쳤다.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양국의 장거리 핵탄두를 수백기 줄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UN에서 NPT 평가회의가 열릴 것이다.(중략)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백악관의 약속과 최근 러시아와의 군축 협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연구와 개발을 위한 2011년 연방 예산은 7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2010년대 말까지 매년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꾸준하고 계속 늘어나는 투자는 백악관의 군축 약속과 모순된다.(중략) 조약들과 협정들, 정상

회의들의 장황함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3가지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무기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다. 우리는 NPT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핵’은 핵발전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 여성 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s Research Critical Will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행한 인터뷰에서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와 게이트 국방장관은 또한 미국은 올해 현존하는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50억 달러를 썼다고 강조했다. 모순적이게도 게이트 장관은 이란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란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피터 스탭튼(Peter Stockton)

- 미국 정부 감독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POGO)



세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 있는 핵물질 방호를 위해 2011년 예산에서 확실한 투자를 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40여 개 국가들이 자국의 핵안보 공백을 다루도록 유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그 나라들이 따라오도록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핵 테러리스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다. 100 파운드의 HEU만 있으면 히로시마를 완전히 파괴한 것과 동일한 폭발을 만들 수 있는 핵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비록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이 물질에 대한 미국의 안보는 증진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무기 개발 단지에서 너무 많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2011 회계연도 예산은 HEU 해체와 가장 확실한 HEU 방호 수단의 예산을 삭감했고, 장기적 목적으로 많은 HEU를 비축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예산을 증액했다. 이것은 다른 정상회의 참가국들에 그들의 비축량을 줄이거나 방호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잉그리드 드레이크(Ingrid Drake)

- 미국 정부 감독 프로젝트(POGO)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4년 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서 미국은 다음 달에 40여 개국 정상들을 불러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세계에 12만 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상회의의 좋은 근거가 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HEU와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무기급 물질의 안보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중략) 대통령이 2011년 예산에 핵물질 방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위해 3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 본토에 있는 플루토늄과 HEU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HEU를 무기로 사용하는 데에 유용하지 않은,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목표물이 되지 않고, 관리하는 데 보다 쉽고 저렴한 저농축우라늄(LEU)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은 별로 책정되지 않았다. HEU의 LEU 전환 대신에 미국은 최소 400 미터톤의 HEU를 비축하고 있다.

무기 개발과 관련된 예산 10% 인상과 퇴역 무기 해체 예산 39% 삭감은 미국의 핵분열물질 안보 강화가 우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다. 퇴역 무기들이 해체될 때까지, 그것은 여전히 미국 혹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혼란스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해체해야 할 수천 기의 핵탄두 업무를 누적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고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중략) 핵물질의 안보에 대한 이러한 공백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의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까지 모든 취약 핵물질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나라는 어디도 없을 것이다.

〈자료 2〉

핵안보 관련 주요 협약 및 문서

1. 핵테러 억제협약(ICSANT)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개요

- 1994년 12월 UN 총회에서 ‘국제 테러리즘 근절조치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이 채택된 이후, 1996년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 테러리즘 억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2005년 4월 UN 총회에서 채택.
- 현재까지 115개국이 서명하였고, 2007년 7월 발효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 현재 총 77개국이 비준.
- 한국은 2005년 9월 서명하였으며,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

주요 내용

- 인명살상,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한 핵물질·방사성 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 사용 행위 및 핵·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을 사용, 손상시키는 행위를 협약 상 범죄로 규정

하고, 이를 국내법상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토록 함.

2.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 CPPNM Amendment,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개요

-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AEA가 제안한 국제 협약으로 1980년에 채택, 1987년에 발효.
- 2005년 7월에는 협약 개정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가 간 운반 중인 핵물질에서 국내 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시킨 개정안이 채택됨.
- 개정협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 협약 당사국인 145개국의 2/3인 97개국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나, 2011년 12월 13일 현재까지 52개국만 비준한 상태.
- 한국은 1987년 발효된 핵물질 방호협약의 경우 1982년 4월 비준하였으며, 개정협약은 현재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중.

주요 내용

-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 이동 중인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 횡령, 핵물질 강제탈

취 시도 및 관련 위협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토록 규정.

2005년 주요 개정사항

- 협약 적용 범위 대상을 핵물질을 생산, 처리, 사용, 취급, 저장, 처분하는 건물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하는 핵시설로 확대 적용.
- 2001년 IAEA 총회에서 승인된 '12개 물리적 방호 기본 원칙'을 협약 부속서로 수용하여 물리적 방호 규제 강화.
- 핵물질 및 핵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협 발생 시 사전 통고에 관한 조항 신설.
- 사보타주 범죄, 환경에 대한 손상에 관한 조항 신설.

3. 안보리결의 1540호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개요

- 2003년 9월 UN 총회에서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하여 수출 통제 체제 강화를 요구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2004년 4월 28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 1540을 채택.
- 이후 안보리는 결의 1673호(06.4.27), 1810호(08.4.25), 1977호(11.4.20)를 통해 1540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21년 4월 25일까지

지 연장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을 제도화.

주요 내용

-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적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주요 조항별 내용

- 1항 : 비국가행위자의 WMD 제조,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 금지.
- 2항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 목적 WMD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을 위한 공범, 지원, 자금조달 금지.
- 3항 : WMD의 계량관리, 방호, 국경통제, 불법거래와 중개 탐지 및 저지 등 국내조치 집행, WMD의 국내 수출통제와 환적통제 체제 수립 및 발전·유지.
- 4항 : 결의 1540위원회 설립 및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 10항 : WMD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간 협력 촉구.

4. INFCIRC/225 핵 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 IAEA Information Circular/225

개요

- 1970년대 핵물질의 국제적 운송이 활발해짐에 따라 핵물질 방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자, 1972년 IAEA 주도로 핵물질 방호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핵물질 방호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었으며, 1975년 동 문서가 일부 수정되어 INFCIRC(IAEA 문서번호)/225로 공식 발간.
- 4차례(1977, 1989, 1993, 1999) 개정을 걸쳤으며, 2008년 2월부터 제5차 개정을 위한 검토회의가 개시, 2010년 9월 최종 기술회의를 통해 확정.

INFCIRC/225 4차 개정문의 주요 내용

- 위협평가에 근거한 방호 체계 수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회원국의 물리적 방호 체계, 사용 및 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방호조치, 사용 및 저장 중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조치, 운송 중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규정.

INFCIRC/225 5차 개정문의 주요 내용

- 2005년 개정된 핵물질 방호협약(CPPNM)의 주요 개정내용인 “물리적 방호의 12가지 기본원칙”을 본문에 상세히 설명.
- 운송 중 핵물질의 도난 및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강화.
- 물리적 방호 관련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성능기반 방호요건 추가.
- 분실 및 도난 핵물질의 회수에 대한 물리적 방호 요건 확대 수록

5.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개요

-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및 핵 테러 대응 관련 정보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2006년 11월 13개 원회원국 및 IAEA(옵서버)의 GICNT 원칙선언문(SOP: Statement of Principles) 채택을 통해 공식 출범.

GICNT 원칙선언문 주요내용

- 핵 테러 억제협약, 핵물질 방호협약, 안보리결의 1373호(대테러) 및 1540호(WMD) 등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핵 테러 근절을 위해 노력.

GICNT 원칙선언문(SOP) 상 8개 협력 분야

- ① 핵물질·시설 관리 및 보호 강화
- ② 민간 핵시설 안전 강화
- ③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탐지능력 강화 및 연구
- ④ 불법 핵·방사성 물질의 탐색, 압수 및 통제체제 확립
- ⑤ 테러리스트에 대한 피난처 제공 및 재정지원 금지
- ⑥ 핵 테러 처벌규정 도입

⑦ 핵 테러 대응, 수사, 경감능력 향상

⑧ 회원국간 정보 공유

활동 현황

- GICNT 가입에 따른 별다른 법적 의무 또는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회원국들은 각국 관할권 내에서 핵물질 및 시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핵물질 절취 및 유출 방지, 민간 핵시설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고 국제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핵 테러 대응역량 강화 도모 및 정보교환 촉진.
- 현재 82개 회원국과 4개 옵서버(IAEA, EU, 인터폴, UNODC) 참여.
- 2011년 6월 대전에서 제7차 GICNT 총회 개최

6. G8 글로벌파트너십(G8 Global Partnership)

개요

- 9/11 이후 핵 테러 대응이 강조됨에 따라 구소련 지역의 WMD 관리를 위해 서방국가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국제적 자금 마련을 통해 WMD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
- 2002-2012년간 200억 달러를 조성하여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 화학물질 폐기, WMD 프로그램 종사 과학자의 재고용 사

업 등에 투입 예정.

- G8 글로벌파트너십 공식 참여국은 모두 23개국(G8, EU, 한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호주, 벨기에, 체크,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식 수원국이고, 러시아는 공여국인 동시에 수원국.

CTR vs G8 Global Partnership

-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구소련의 대량파괴무기(WMD) 및 관련 물질·시설의 폐기와 감축을 위해 미 국무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제반 협력 프로그램.
-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수의 서방국가들도 자체적으로 CTR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제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G8 국가 주도로 G8 Global Partnership을 발족함. 즉, G8 GP는 CTR이 국제적으로 확대된 형태.
- G8 GP는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 후, 이를 G8 GP 실적으로 보고.


함께 합시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 핵발전 확대, 수출, 홍보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 핵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로 전환
- 모든 핵무기 폐기, 평화체제 구축
- 핵안보정상회의 핑계로 한 표현의 자유, 민중생존권 탄압 중단

홈페이지 - <http://no-nss.org>



 페이스북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nonss2012>

 트위터 - @no_nss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주요 일정

3/7



핵안보정상회의 대중강좌
오후 7시 30분

3/10



후쿠시마 1주기 집회
서울 시청광장, 오후 1시~6시

3/19



핵없는 아시아 실현 촉구 기자회견
오전 9시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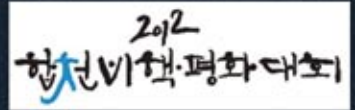
국제포럼/반핵아시아포럼

3/19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항의집회

3/23
~24



합천비핵평화대회

3/25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 집회

3/26
~27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활동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